

전북형 녹색복원 사업 발굴해야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광역생태축 연결 복원, 도시·농산어촌 그린인프라트러처 구축 등 과제 제시

인간 중심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녹색복원 사업 추진이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도내 자연환경 훼손 실태를 파악하고, 녹색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방안 연구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라북도 녹색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녹색복원 사업은 자연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자연성이 훼손된 모든 국토 공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녹색복원 사업 개념을 담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후보지 목록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지원할 예정이다.

천정운 박사(연구책임)는 국내·외 녹색복원 정책동향과 전라북도의 자연생태계 훼손사업 추진현황 및 지난 30여 년간 토지이용변화 분석, 시·군의 녹색복원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 전라북도 녹색복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연의 연결성과 구조·기능의 보전으로, 산림·하천·연안·도시·해양으로 이어지는 광역생태



'전북 청년 합성(함께 성공) 프로젝트 협약식'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청년 합성(함께 성공)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2)와 5개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청년 공약인 '전북 청년 합성 패키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을 연결·복원하고 대규모 복합 생태계 복원사업을 발굴하는 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복원 공간 창출로, 도시와 농산어촌에 대한 그린인프라트러처 구축과 유휴공간·오염부지의 복원 및 하천 자연성 회복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 전략은 생태문화 융합을 통한 지역의 회생·발전으로, 녹색

복원과 생태문화, IT기술을 접목한 생태계서비스 창출, 생태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로, 생태지도 구축 등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시민참여와 정부·지역·전문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천정운 박사는 "전북형 녹색복원 사업 추진은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천 요청과 국가 녹색복원 정책에 부응하고, 전북의 고유한 생태·환경자원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 전문가,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학교-실업체육 밀착 연계를”

문승우 도의원 주관, 오늘 도의회서 연계방안 세미나 개최
체육정책 현주소 진단·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제 제시

10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에서 문승우 의원 주관으로 학교체육과 실업체육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스포츠택서학원의 정현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으로는 전북도청 박성현 양공립 감독과 호원대 펜싱부 이장복 감독 등 체육지도자들과 체육정책을 담당하는 도청 및 도교육청, 도체육회 담당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정현우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기반 학교체육-실업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전라

북도의 체육정책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가서 학교체육과 실업체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문승우 의원은 "학교체육과 실업체육의 효과적인 연계 및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체육정책의 변모는 물론이고 체육강도로 발돋움하는 것도 하체일이 될 수 있다"면서 "체육행정 당국과 체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도내 학교운동부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와 학생선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업팀의 경우 도내 출신 우수 선수의 외부 유출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내 기초의회들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진행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우)가 9일 제 2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으로,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익산시 청렴도 향상지원 조례안(정영미 의원),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종현경경숙 의원), 익산시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조례안(한동연 의원)등이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한동

연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제안했다. 이어 송영자 의원 대설로 인한 택시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종우 의장은 "각 분야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지원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훈기자

고창군의회, 새해 주요업무보고·16건 의안 심의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3건 총 16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상정된 조례안으로는,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문화의원 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9건의 조례안이 있다.

이날 임정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으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말하며, "군 차원에서 기업의 RE100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野, '尹·김건희 풍자' 국회 사진전 철거에 "야만적 행위"

'처형회'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는 사진전을 국회사무처에서 철거한 데 대해 "국회사무처는 부당한 권력에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시는 9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시회 취지는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권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한 언론권력,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사법권력을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것"이라며 "10·29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회생지를 기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를 향해서는 "풍자로 권

“표현의 자유 용납 못하는 국회... 부끄럽다
주최 측·공동주관 의원과 철거 협의 안 돼
이광재 "이태원 국조 뒤가 좋다는 데 공감대"

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시민들에 미처 공개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구석 어딘가에 갇혔다"며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거는 주최 측과 협의되지 않았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국회의원 12명도 철거에 동의한 바 없다"며 "오직 국회사무처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무단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사무처는 공동주관 의원실에 어제(8일) 저녁 7시 이후부터 공문을 보냈다. 세 차례 '자진철거'라는 이름으로 겁박했다"

며 "늦은 시간이라 공동주관한 의원들 간 소통이 어려우니, 다음날에 답을 드리겠다 했지만 철거는 새벽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사무처의 이번 행태는 신화철 화백의 '모내기'를 몰수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낙인찍었던 1989년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로의 퇴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라는 공간은 그 어느 곳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한껏 보장해야 마땅하다.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한 채 예술인을 억압한 국회사무처의 야만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웃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사무처"라며 "사무총장을

감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김 의장은 이제라도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다가가 수 있도록 철거한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동작)·장경태·최강욱·황은하(이상 민주당)·민형배·윤미향(이상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하나 비귀위를 뿐인데 만평과 풍자도 무서워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슬프다"며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사무처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